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공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2년 8월 23일

“고객과 함께하는 공사,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의 공사”

“도민 모두 만족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 전북본부장으로 취임 후 균형과 역점사업은?

올해로 114년 역사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정 최일선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하며 농어촌자원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을 수행합니다. 농촌융수 공급 및 농지은행 등 주요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현장을 둘러보며 농어업인,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22년 2월 농지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을 담당하는 '농지관리원'이 출범해 기존 농지은행 중심에서 농지상사관리조사 사업을 통한 지자체 농지관리업무까지 지원해 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지관리원' 출범으로 전북에서도 농지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농지상사조사, 농지원부(농가)를 농지대장(필지)으로 개편해, 미등록 농지 현지조사로 현행화를 통해 지자체 농지행정을 지원하는 농지정보 종합관리, 지자체 농지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농지제도 교육 및 농지법 등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농지행정 역량강화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99억 증가한 1,740억을 투입해 농업인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1,060억)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443억이 투입되며,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 노후를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은 113억이 투입됩니다.

»»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자체가 농촌공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제도'를 전북본부가 선도합니다. '20~21년' 농촌협약지구로 선정된 사·군은 총 32개이며, 그중 전북은 5개 사·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년' 선정된 임실군과 순창군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했고, '21년' 선정된 무주·진안군·김제시도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전북본부가 지원했습니다.

한편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 순창·무주·진안군·김제시 간 농촌협약 MOU(총 1,373억)를 체결해, 농촌협약 사업 성공 추진과 사·군 지속가능한 발전도모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전북본부는 여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해 상품개발·판매·홍보 지원으로 어촌경제에 기여했습니다.

»» 전북본부 청사 및 시설, 조직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내역은?

전북본부는 본부에 지사를 총괄 관리하는 7개부를 두었으며, 관내 14개 시·군 지역에 10개 지사(36부, 3지부, 5직제지소)를 운영합니다. 전북본부는 경영관리/사업관리/사업지구 조사·설계/용수공급 체계관리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조직인 지사는 사·군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은행/지역개발/시공관리/용수공급 등 현장지원과 사업집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북본부 관리면적은 9만8,216ha로 전국 노면적(83만ha) 12%, 전북도 노면적(12만4천ha) 79%이며, 용·배수로 현대화율은 53%에 달합니다. 농업기반시설물은 저수지 415개소, 양·배수장 689개소, 취입보 622개소, 관정·방조제 356개소 등 총 2,082개소를 관리합니다.

»» 올해 역점사업 중 특별하게 관심 있는 사업은?

기후변화 및 안전 영농기반 구축과 재해에 취약한 노후·파손 시설 보



‘양정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은 누구인가?

양정호楊定熙 전북본부장은 1966년 12월 전북 순창 태생이다. 전라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양 본부장은 2012년 서울대 고급경영자과정도 수료했다. 199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한 이후, 고창지사 농지은행부장, 인사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전북본부 농지은행부장, 보상사업단장, 경영지원처장, 금강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본부장을 역임 중이다.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용한 업무처리에도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수를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984억, 95지구 추진으로 안정 영농기반시설을 확대합니다. 최근 이상기후 대비 재해방지 홍수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 7개소도 추진합니다. 본부·지사 기술협력으로 기존 무인자동화시설(60개) 활용성 향상 및 신규 배수장 AI관리를 도입(익산 내촌지구 배수개선) 했습니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가치 있는 어촌자원을 이용해 어촌이 활성화되도록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분야 신규사업으로 2019~22년까지 10개 지구를 수주했으며, 유관기관 및 주민과 연대와 협업을 공사 인력 및 사업 추진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19년 착수지구인 군산시 평도항 어촌뉴딜사업은 금년 상반기 성공 종료할 예정이고, 22년 착수한 2개 지구(부안 송포항, 군산 야미도)도 내실 있는 기본계획수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전북본부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산물구리미 판촉행사' 등 다양하게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합니다. 농어촌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건강 도시락을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행복한 진지상 차려드리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번기 파종이나 수확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KRC 영농도우미', 농어촌 노후 주거환경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코로나로 적정월액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단체 헌혈', LNH 공기업과 연계해 기부·공유 '에코백 및 물품 챌린지 행사 참여' 등을 실시합니다.

»» 지자체 등 유관기관 및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농어업은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했고, 농정패러다임 변화와 코로나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어촌이 힘든 시기인 만큼 전북본부는 농도전북 농업대표기관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농어업인이 의지할 동반자가 되고, 사업성과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께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공사,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의 공사'로서 도민 모두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국장/고재홍 gjh@naewoeilbo.com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전 6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을지연습을 시작했다.

충북 농어촌공사, 25일까지 을지연습 실시

전시 농업용수 관리체계 숙지 등
농업기반 시설물 파괴 대비 만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전 6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을지연습을 시작했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정부 기초,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비상대비업무 절차 숙지, 전시 농업용수 관리체계 숙지 등을 이번 훈련의 중점에 두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비상소집 훈련 후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시대비연습에 들어갔으며, 연습기간 중 비상사태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황별 도상훈련, 소산 이동 점검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공사 핵심 시설인 오창저수지 제방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여 하류지역 주민대피 및 복구훈련을 실제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홍섭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및 농업 기반시설물 파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기상황 대응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을지연습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상기)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본부는 전쟁 이전 또는 전쟁 발발 시 위기사항을 가정한 도상연습과 수리시설 응급 복구 실제훈련을 통해 전시 및 평시 재해·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사업 주택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제공>

농어촌공 영산강사업단, 印尼 현장견학 성료

고위공무원 대상 영산강하구둑·산이배수갑문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사업주택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견학은 영산강하구둑, 산이배수갑문을 차례로 방문해 수위조절, 관개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향후 현지 도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헤트만위조조 인도네시아 자문관(부통령실, VP Advisor)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영산강사업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지구, 대규모 배수갑문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개시설 구축 및 배수갑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환 단장은 “영산강사업단의 배수갑문 운영관리 능력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날 현장견학을 통한 인도네시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발전과 자연재해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착공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22일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착수해 실시설계가 올해 6월 완료됐고 내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동리 일원에 연산별당과 사랑채를 조성하고 선비로 경관개선 등이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산별당은 연산면의 통합형 문화복지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여러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연산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서

비스 접근성 개선과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국 논산지사장은 “토목건축공사의 착공으로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준공까지 안정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주민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란 농촌의 중심지역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생활 서비스 기능을 보강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논산=전현민 기자

경계 넘나들며 '농부로운 생활' 즐기는 청년 농부 공유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31일 '자파리 청년농부' 네트워킹 식문화 커뮤니티농부요리사로컬라이프 연구소 등 참여 영역 확장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무국(사무국장 오윤미)은 도내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농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청년농부들을 초청, 오는 31일 '경계를 넘나드는 청년농부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좌읍 소재 소농로드에서 개최되며, 참가신청은 22~29일까지, 프로젝트그룹 짓다 인스타그램(@projectgroupjidda) 및 구글 설문링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마을이나 지역 사회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농부들인 '자파리 농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농부콘텐츠로 마을을 디자인하는 ㈜촌스런, 식문화 커뮤니티 '벗밭', 농부요리사 '베롱키친', 도시와 시골을 잇는 즐거운 '도시락', 색다른 로컬라이프 커뮤니티 '브로콜리연구소', 제주대표 반농반x '프로젝트짓다' 등이 참석해 농촌에서 농사와 더불어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들려준다.

참가자들은 '나의 농부로운 생활'을 주제로 자유롭게 피칭하며,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소셜다이닝을 겸한 그룹별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의제발굴 원탁회의인 제주에서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나의 업(業)>에서 발굴한 의제를 바탕으로, 7월 성항리에 열린 <청년창업가 네트워킹 파티: 어찌다 사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후속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무국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공동 기획하고, 청년농업프로젝트그룹 짓다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강동우 기자



이천 부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등 50건·3689억 발주 '스타트'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계약요청

5년 전 탄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기타공사로 곧 발주된다. 22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주(8월16~19일) 조달청에는 총 추정금

액 3689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50건에 대한 계약요청이 이뤄졌다. 이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이 요청한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유일하다.

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은 △강원랜드의 '고한 직원숙소(4차) 신축공

사'(264억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지사의 '부림지구 배수개선 사업 토목공사'(105억원) △대한체육회의 '체육인교육센터 건립공사'(191억원) 등 3건이다.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강원도삼척시 상수도사업소의 '하

장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110억원)' △충청북도의 '문방천 문방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257억원)' △전라북도 순창군의 '동계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239억원)' △경기도 광주시의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142억원)' △경상남도 양산시의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단계 총괄(111억원)' 등 5건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평림댐 가뭄 '심각'...물 절약 실천 요청

•

환경부, 평림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 544mm로 예년 대비 57% 불과...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남부지방 11곳 댐 중 '심각' 단계는 2곳



환경부는 남부지방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댐 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평림댐이 어제(21일)을 기점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에 있는 '평림댐'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남부지방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댐 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평림댐이 어제(21일)을 기점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오늘(22일) 오전 7시까지 평림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544mm로, 이는 예년 대비 5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평림댐은 지난 6월 19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7월 2일 '주의' 단계, 어제(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평림댐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남부지방 11곳 댐 중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기존 운문댐을 포함해 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수댐인 평림댐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가뭄단계를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구분해 용수공급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부터 하천유지용수 전량(0.35만t/일)을 감량했고 농업용수는 탄력적으로 감량해 현재 농업용수의 50%(0.85만t/일)를 감량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 '관심'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인근 농업용 저수지 2곳(장성호, 수양제)과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림댐의 용수 일부(최대 1.5만t/일)를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평림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담양군·장성군 등을 대상으로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자율절수 수요 조정제도'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신 축하해, 근데 일은 해야지"...세계 꼴찌 출산율의 단면

"임신 축하해, 근데 일은 해야지"...세계 꼴찌 출산율의 단면

[앵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 임신 중에도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 조산으로 미숙아를 낳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임신부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법에 근거해 단축 근무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듣고 해고까지 당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눈치밥을 먹으며 일하는 임신부들의 상황을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A 씨가 받은 모바일 메시지입니다.

사내에 떡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각입니다.

A 씨는 재작년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다 20주 안에 유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단축 근무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팀장의 폭언이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팀장(지난 2020년) : 일단은 축하를 드려요. 축하해드리는데 프로젝트잖아요. A 씨가 법적으로 누릴 권한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이 폭언 이후 3일 만에 해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도 해 봤지만, 합의만 중용할 뿐이었습니다.

[A 씨 / 전직 공공기관 위탁연구원 : 다른 배심원들이 (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면 너의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합의금 제시할 때 받아들여라....]

취재 결과 3명 가운데 1명꼴로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 지원센터가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접수한 민원 9천여 건 가운데 임신·출산·육아기 때의 불이익 처우 관련 상담이 3천백여 건이었습니다.

출산 전후로 휴가 내기 쉽지 않다는 내용의 상담이 5백여 건이나 있었고, 임신이나 육아 때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모성 보호 관련 법이 하나둘씩 완성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임신부들에게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특수 직종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예외가 존재합니다.

[권호현 / 변호사 :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기존 법령들이 적어도 모성보호에 관해서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원 하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모성 보호 강화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원중]

정부 2002년 도입 이래 37번째 선포

시군구 지자체는 8곳, 읍면동 지자체는 2곳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오늘 10일 아침, 성남시 상대원동 버스정류장 도로가 폭우의 영향으로 파손이 됐다. 또 폭우로 떠밀려온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인도를 막고 있다. (2022.8.10 성남) / 사진 = 프리랜서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원중 기자 =정부는 오늘(22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등 8개 지자체 지역 전체와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일부 읍면동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시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구분	계	시군구	읍면동	비고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	횡성군	-	
충남	2	부여군·청양군	-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공공기관, ESG 실천 인정서 받는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 시행

1·2차 심의 거쳐...정부 포상도 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해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정절차는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참여기업·기관들의 상생협력 및 ESG 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업·기관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1차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 수정·보완의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2차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농어촌 ESG 실천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인정 기업에 대해선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한다. 우수기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 등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尹 "한반도 평화 유지 위해선 빈틈없는 안보태세 갖춰야"

[장연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국 규모로 진행되는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이번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 및 시·군·구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등 4000여 기관의 48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방패·UFS)와도 연계해 실시됩니다.

정부, 재정사업 평가 미흡하면 예산 삭감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요

- ❶ (성과목표관리) 부처단위의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도입('03년~)
→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
 - ❷ (사업성과평가)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도입('05년~)
→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 운영 중
- * (기재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기부) R&D사업평가, (고용부) 일자리사업평가, (균형위) 균형발전평가,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부분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 반영 제도가 없어 예산 편성 때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6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칙이 도입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되는데, 삭감 비율은 최소 1%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정부는 또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 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 '긴축' ... 640조원대 될 듯

[성홍식]

올해 총지출예산안보다 약 40조 줄여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위기 땐 예외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640조원대로 편성할 방침이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40조원이 줄어들게 된다. 내년 예산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이는 긴축예산 편성은 약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 적자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든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 주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 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1년 5.6%(112조5000억원), 2022년 4.4%(94조1000억원)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복지예산을 늘린 데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예산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예산으로 돌아서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년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기조실장까지… 尹정부도 ‘기재부’ 모시기

‘예산확보 용이’ 인식에 잇단 영입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 모시기 경쟁이 여전하다.

예산 확보에는 기재부 출신만한 묘수가 없다는 인식이 부처와 광역단체 등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2일 기획조정실장에 기재부 출신인 강완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기획단장을 임용했다. 강 실장은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 학·석사, 미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기획재정담당관, 타당성심사과장, 민간투자정책과장, 재정제도과장 등을 역임한 재정·예산 전문가다.

국방부는 강 실장을 영입한 이유로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혁신,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주요 현안의 조정과 국정과제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조실장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출신이 중용된 사례는 강 실장 외에도 수도룩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지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재부에서 제1차관까지 올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무부·재정경제원(현 기재부)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획예산처(현 기재부) 재정운용실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기재부 제1차관을 지냈다.

이밖에도 기재부 세제실장과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낸 윤태식 관세청장, 기재부 기조실장, 국고과장 등을 역임한 이종욱 조달청장, 기재부 차관보·경제예산심의관 출신인 한훈 통계청장 등 기재부 산하 4개 청 가운데 국세청을 제외한 3개 청의 수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또 부처 중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을 지냈고,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김용진 경기 경제부지사, 김병규 경남 경제부지사, 전형식 충남 정무부지사, 이종화 대구 경제부시장,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안도걸 광주 재정경제자문위원 등이 기재부 출신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등이 지난 5월27일부터 6월27일까지 부처 장·차관급, 산하 공공기관 준차관급 및 이사직 등 총 545개 직위 중 공석을 제외한 나머지 533개 직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중 기재부 출신은 총 65개로 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

4차산업 시대...향후 5년간 모든 산업에 73만명 수요

[정철순]

디지털 인재 왜 필요한가

정부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내건 배경에는 향후 5년간 인재 수요만 73만여 명에 이르고, 4차 산업 시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보고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을 비롯한 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며, 인재 양성의 주체인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약 9만9000명(석·박사급 약 1만7000명)에 그치지만, 향후 5년(2022~2026년)간 인재 수요는 약 73만8000명(초급 9만 명, 중급 52만 명, 고급 12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등학교에 필수화시켰고 2020년부터 고교 교과 과정에 인공지능(AI) 과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체 중학교(3172교) 중 정보교과 교사의 정원 내 배치 학교는 총 1510교(47.6%) 수준이다.

한국은 반도체·기술산업 강국으로 분류되고 인터넷 접속 환경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청소년들이 디지털 교육 수준이 높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디지털 교육 능력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사실 / 의견 식별능력)'은 25.6%에 불과해 OECD 평균(47%)에 크게 못 미치고, '디지털 교육 기회'는 49%로, OECD 평균(54%)보다 낮다. 디지털 환경은 일정 수준 갖춰졌지만, 이를 산업 현장에 쓰이게 할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춘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공공기관 향한 칼날에 '신의 직장' 향한 취업문 더 좁아진다

[세종=이정아 기자]

정부, 공공부문 혁신 추진... 2023년부터 정원 감축

지난해 공기업 신규채용 6365명... 5년전으로 회귀



(사진=연합)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청년층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이 도리어 청년들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3대 혁신과제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오는 2023년부터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기관 구성원은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인력을 축소한다. 또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 작업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현재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 보다 3만3666명이 많다.

문제는 공기업의 신규채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다 정부의 혁신방안까지 겹쳐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본보가 기재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신규채용(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859명이었던 신규채용 규모는 2019년 1만2162명까지 확대된 후 2020년 8365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6365명까지 줄었다. 채용 시장 규모가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기재부는 자연 감소하는 인력의 일정 비율을 신규채용을 병행해 신규채용 규모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현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혁신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17명,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0명에 그친 바 있다. 전년보다 각각 343명, 156명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지난 코로나19로 공공부문에서 신규채용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청년실업 문제에서 공공부문이 일정부분 소화해야 하는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인력 감축을 시도하면 당연히 신규채용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인력감축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고 신규채용 감소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불안한 추석 물가..."폭우로 채솟값 더 올랐다"

[윤성훈]

무 1개 할인가격 2,824원...1년 새 61% 올라

"폭우·장마 등 산지 사정으로 물량 부족" 안내

배추 1개 할인가격 5,200원..."짓무름 주의"

[앵커]

최근 내린 폭우 탓에 안 그래도 비싼 채솟값이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빨라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도 커질 거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물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윤성훈 기자!

[기자]

네,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최근 몇 달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비 때문에 채소 가격이 또 치솟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전 이른 시간이라 마트엔 아직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장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채소 코너에서는 대부분 선불리 물건을 담지 못하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우선 무의 권장소비자가격은 4천480원, 할인가는 2천800원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1% 넘게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우, 장마로 인한 산지 사정으로 물량이 부족하다는 안내 문구도 걸려 있습니다.

배추 역시 한 개에 6천500원, 쿠폰을 활용해도 5천200원 수준인데 고온, 다습한 기온 탓에 속에 짓무름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른 채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이는 5개에 7천700원대, 애호박 1개는 3천400원대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62%와 173%씩 오른 수준입니다.

시금치 한 단, 4백 그램 가격도 7천980원으로 1년 새 37%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채솟값이 많이 오른 가운데 과일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격동향을 보면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와 배 10개의 가격은 각각 3만700원대, 4만2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21%, 6%씩 오른 상황입니다.

채솟값과 과일값 부담이 커진 건 앞서 내린 폭우 때문인데요.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가 무려 천754헥타르로 채소의 품질은 물론 전체적인 공급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평년보다는 10% 정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마트에서는 축수산물 20개 등 가격이 오른 100대 품목에 대해 추석 때까지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정부 역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역대 최대인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쌀값, 45년 만에 ‘최대 낙폭’... “정부 대책 뭘가” 집중포화

국회농해수위 전제회의

“장관님! 풍년이 축복입니까, 원수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늘이 준 풍년의 축복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쌀값이 1년새 20% 이상 폭락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마침 ‘쌀의 날’이었던 8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제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쌀값’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듭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정부가 3차례에 걸쳐 37만톤 규모의 쌀을 격리하는데 9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썼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은 데다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집하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재갑(전남 해남 완도 진도) 의원은 “작년에 선제적인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껌쩍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뒷북을 치다보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 양양) 의원도 “1년 전 상황”을 거론하며 같은 지적을 내놔다. 그는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전임 장관에게 2021년은 풍년이다. 최소 35만~45만톤은 격리해야 한다.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냈었다”면서 “그런데 당시 장관은 27만톤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아니냐 다를까. 올해 쌀값이 이렇게 떨어졌다. 확실한 물량을 사전에 격리, 시장에 미리 신호를 줬다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값 하락 원인 두고 ‘공방’ 가열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시기 농친 시장 격리 ‘도마’ 여야 “정부 뒷북” 난타전
수확 앞두고 농가 불안 가중
선제·능동적 대책 마련 촉구
정황근 장관, 선제조치 약속
‘물가안정 1순위’ 두고도 논란
농가 손해 대책 마련 주문

뒷걸음치고 있는 데 대해 정황근 장관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쌀 수급불균형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 화순) 의원은 “단순히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곡 재고량이 180만톤에 달했던 2017년에도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고미는 75만톤에 불과했다. 그는 “쌀 수급 문제가 정확하게 쌀값에 연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쌀가격 정상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갖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방향에 따라 쌀값은 결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올해 수확기가 매우 중요하며, 정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 신곡 수매와 관련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농업소득은 더 줄어든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불안한 농민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올 수확기를 어떻게 넘여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현 정부가 설게 중인 전략작물직불제도나 분질미 대책 등을 통해 좀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능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황근 장관은 “8월 말 재배면적 조사가 나오고 9월 15일면 금년 쌀 생산량 추정치가 나온다. 그러면 수요를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공용 쌀인 분질미 재배를 2000ha까지 늘리고, 이모작으로 밀·콩·조식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50만원 수준의 전략작물직불제를 지급하면 충분히 농가소득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3년간 7만7000ha에서 논 타작물을 재배, 약 40만톤의 사전 격리효과가 있었다. 시장에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을 줬고 쌀문제 해결에 기여한 게 사실”이라며 “내년에 예상되는 쌀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0ha의 분질미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며 대책을 물었다.

정 장관은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다. 기왕이면 식량자급을 높이면서 수급조절 효과도 내기 위해 분질미에 대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거다. 논 타작물 재배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왜 농식품부 업무보고 1순위가 ‘물가안정’인가

이날 의원들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물가안정’을 1순위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데도, 농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생산비 급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추석물가 안정이 아니라, 물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가들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장수)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을 회생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가격이

높을 때는 낮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가격이 낮을 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부처가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농식품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농민

들의 불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주는 게 농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입이 늘 수밖에 없다. 최대한 균형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쌀대책 촉구’ 결의안 합의

◆‘쌀값안정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의결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쌀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가 상정,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3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쌀값이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은 농가의 경제적 이득을 침해시키고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쌀 수매를 담당하는 지역농협도 재고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다. 곧 햅쌀이 출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쌀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장 격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농업이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 편이어야 한다. 물가는 기재부에 맡기고, 농식품부 장관께서는 생산자인 농민 편에서 먼저 걱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사업 '1년 시범'으로 그치나

기재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여파
내년 시행 예정이던 본사업 '무산'
긴축 따른 복지 위축 우려 현실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사업 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 본사업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농업 분야)이기도 하다. 긴축재정으로 복지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없어지면 안 되지.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30년 넘게 벼농사를 짓는 최윤순씨(63·전북 익산)는 지난 1일 원광대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았다. 그간 허리·무릎이 결리고 아파 동네 병원을 찾으면서도 건강검진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빠듯한

데다 비용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최씨는 “오전에 검사받고 오후에 결과가 바로 나와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을 들었다”며 “막연히 큰 병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최씨가 낸 검진비는 2만원이다. 전체 비용 20만원 중 18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았다. 앞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대상은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이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다.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유병률은 70.7%로 남성농업인(55.1%), 비농업인(52.2%)보다 높다. 근골격계 의료비용도 여성농업인의 비용 부담은 125만5000원

으로 남성농업인(92만8000원), 비농업인(30만4000원)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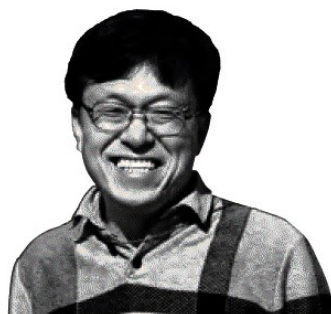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2019~2020년 연구용역 등 준비사업을 마친 끝에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9000명)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 본사업(380억원·60만명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예산이 다시 ‘기재부 벽’에 막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본사업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긴축예산을 마련하기로 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복지관련 사업은 삭감 1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수차례 연구·사업을 진행해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이제껏 국가가 방치해온 농민 건강을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또다시 미루고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용 기자 ban@kyunghyang.com

농촌 파괴의 현실을 보며

하승수 변호사의 시시비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도
공장과 도시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곳도 그곳이다. 토석을 필
요로 하는 건설사업이 많이 벌
어지는 곳도 도시이다. 그런데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농촌
이 지는 구조이다.

작년에 농촌, 농사, 농민을 돕겠다면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출발한지 1년 반
이 지났다. 그동안 농본을 찾아온 여러 농
촌 지역의 사안들을 모아보면, 농촌의 현
실이 어느 정도 보인다.

가장 많은 사안은 산업폐기물문제였다.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병원에서 나
오는 의료폐기물들이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다. 농촌에 소각장, 매립장, SRF(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등의 시설들을 설치해
서, 폐기물을 태우고 묻겠다는 것이다. 전
라남도 벌교에서부터 강원도 강릉까지 전
국 곳곳에 이런 사안들이 있는 상황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폐기물, 의
료폐기물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
면서 사모펀드들과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기업들이 기업 인
수합병 시장에서 수천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은 자본이 벌고, 피해는
농촌주민들이 입고, 여러 가지 문제해결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잘못된 일들
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폐기물과 연결된 문제로 산업단지
문제도 심각하다. 과거에는 꼭 필요한 산
업단지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산업단지가
이미 1262개(2022년 3월 기준)에 달한 상
황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때문에 인·허가가 쉬워지자, 산업단지
가 부동산 사업, 산업폐기물사업으로 변질
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싼값에 농지
와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이윤을 쟁길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심지어 산업단지로 인·허가를 받
은 후 그 안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함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는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더 많은 이윤을
노리는 듯한 현상도 나타난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변 주민들이 환
경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토석채취(채석장) 문제도 심각하다. 농
촌지역에 있는 산을 까뭇개면서 토석을 채
취하는데, 돌가루로 인한 농사피해, 저수
지피해, 소음, 진동 등 인근 주민들은 살 수
가 없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업체들은 일
단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연장하고 확장
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다. 심지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발전소와 송전탑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전기도 많이 쓰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규
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까지 건설해서 공
장과 도시로 송전하려는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소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같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책임지지
않고 민간자본에게 맡기다보니, 돈을 벌기
쉬운 쪽으로 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농촌보다
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현재
의 산업구조에 있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에 있다.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도 공
장과 도시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곳도 그
곳이다. 토석을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이 많이

벌어지는 곳도 도시이다. 그런데 피해와 부
담은 고스란히 농촌이 지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가 바뀌려면, 가장 먼저 필요
한 것은 ‘공감’과 ‘연대’이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알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
다.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때이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연대’가 필요하다. 결국 문제가 근
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정책이 바뀌고, 법률
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농촌마을의
힘으로는 그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비
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들이 연대하
고, 그에 공감하는 단체와 조직들이 연대해
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농촌 구
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기막힌 일들이 많다. 자본과 행정·정
치가 유착한 정황들도 많다. 서울 어디에
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농촌에서 일어나
는 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
는다. 그러나 농촌문제는 이미 단지 농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전체의 문제이
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양식있는 언론
의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라진 농지는 복구하기 어렵고, 오염
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렵다. 파괴된 공동
체도 마찬가지이다. 더 늦기 전에, 농촌을
파괴해 온 일들을 돌아보고 바뀌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귀해진 에너지...기후위기 가속화 우려

[조해영]

기후변화전쟁으로 요동치는 세계 에너지 시장

'수급 불안정 대처' 화력발전 눈 돌리는 중국

엘에너지 가격 상승..."개도국 친환경 늦어질 것"



중국 동남부 지역이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각) 충칭 창장강 바닥이 말라붙어 있다. 충칭/EPA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메꾸려는 각국의 대처가 다시 기후변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쓰촨성은 최근 가뭄으로 댐이 말라붙으면서 수력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지나는 창장강(양쯔강) 유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45% 정도 감소했다. 쓰촨성은 전체 에너지의 약 80%를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어 쓰촨성은 물론이고 쓰촨성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쓰는 중국 동부연안의 제조업 지역도 전력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금융 전문가인 노먼 웨이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면 중국은 불행히도 석탄발전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8일(현지시각) 중국 광둥성 역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5개의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광둥성은 2024년 말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9월 말부터 건설을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들이 엘에너지 대신 '값싸고 더러운' 에너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9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엘엔지 확보를 위해 가격 경쟁에 나섰다
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샘 레이놀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이
가격 상승으로 엘엔지 구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높아진 가격을 지불할 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석탄과 석유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
를 둔 가스무역·해운회사 트라이던트엘엔지의 무역·자문 책임자인 토비 콥슨은 “가난한 국가들은 친환경 연
료라는 선택지가 없다”며 “부유한 유럽연합과 동북아 국가들의 엘엔지 가격 경쟁은 아시아 개도국의 석탄
의존이 길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전 시설 강화로 '수돗물 단수' 피했지만 '미봉책' ... 더 큰 '한계 상황' 온다



‘낙동강 녹조’ 대응·전망

학계 “한계 직면... 악화 위험” 경고
부산시·상수도본부 대책 마련 고심
취수탑 대안... 수백억 비용 등 걸림돌
낙동강 수질 개선만이 근본 해결책

사상 최악을 기록한 낙동강 하류 녹조 사태가 강수와 보 방류 등으로 진정세로 돌아섰다. 수돗물 공급을 우려할 위기 상황은 일단 넘겼으나, 기후 변화 추세를 볼 때 비슷한 위기가 더 악화된 형태로 재현될 수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22일 환경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사에서 물금·매리 지점 남조류 세포 수는 mL당 1만 3878개였다. 여전

히 조류 경보가 발령돼 있고 녹조 양이 위협적인 수준이지만, 이달 초에 비하면 녹조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달 8일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사상 최대치인 44만 7075개까지 치솟았다. 다음 날 별도로 이뤄진 물금 취수구 쪽 조사에선 남조류 세포 수가 63만 2648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녹조의 진정세는 이달 초중순부터 남부 지방에도 비가 내렸고, 낙동강 8개 보도 방류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와 부산상수도본부 등은 올 녹조 사태의 정점 구간은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에도 수돗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건 2018년 말부터 이뤄진 시설 강화 효과였다. 이번 녹조 사태보다 훨씬 작은 규모 녹조에도 ‘단수’ 위기가 거론된 것을 고려하면, 당시 시설 강화가 없었다면 올여름 단수 사

태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8월의 경우 물금 취수장 일대는 mL당 남조류 세포 수가 15만 개를 넘어 정수 시설의 ‘블랙아웃’ (전력 중단) 위기 직전까지 갔다. 정수 작업으로 생기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시는 개당 7억~8억 원대 원심탈수 시설 5개를 설치해 슬러지 처리 한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부산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그때 원심탈수 시설이 확충되지 않았다면 올여름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역세척 주기 단축 같은 비상 상황 대응도 사고 없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수 처리 능력으로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낙동강 수문이 계속 상승하는 만큼, 녹조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

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기관과 학계의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상수도본부 등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고심한다. 올 녹조 사태를 계기로 물금취수장에 취수탑을 설치해 수심별로 취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관로, 펌프 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려면 비용이 45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 공유수면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복잡해 결과를 낙관하기엔 이르다.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는 “당연히 취수 시설 보강도 필요하지만, 결국 낙동강 수질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낙동강 보 설치 뒤 녹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녹조 양도 크게 늘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백성 기자 k103@

지난 18일 경남 양산 물금취수장에 녹조 등 조류 유입을 막기 위해 살수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올여름 녹조 사태는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종희 기자 jhp@

‘기후위기’ 실감한 올여름, 대응책 미룰 때 아니다



동아시론

예상옥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해양융합공학과 교수

올여름에는 역대급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기록됐고, 8월에는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내려 8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15년 만에 최대 일 강수량 기록도 갈아 치우면서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불과 석 달 사이 극한 기상현상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이런 이상기후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6월 중국 남부에서 60년 만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7월 상하이의 낮 기온은 40.9도까지 올랐다. 7월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어선 남서유럽은 5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는 1880년 이후 여섯 번째로 가장 더웠다. 흥미로운 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든 해들이 지난 140여 년간 가장 더웠던 해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구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2016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중요해질 세계적 이슈 3개를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아 딱 한 개만 답했다. 인류가 고민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이슈는 딱 한 가지로 ‘기후변화’라는 것이었다. 굳이 리프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극단적 날씨, 물과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생태계 붕괴 등 기후위기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KAIST와 일본 도쿄대 등 7개국 13개 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100년에 한 번 생기던 가뭄이 2030~2050년 사이에는 매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재난의 일상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뭄뿐만 아니라 올여름 중부지방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가열을 막을 유일한 방법 중 하나로 대기 중 온실가스 감축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다. 우리나라

세계 뒤흔 기상이변, 한국도 폭우 큰 피해
10년 뒤 가뭄, 폭우 등 ‘재난 일상화’ 우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 설득 나서야

라도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및 토지 이용 변화와 임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정보를 파악해 정확한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기후 과학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상·기후 환경

간의 상호 작용,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최적화로 기후위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서쪽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다.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초반에 빠르게 감축한 다음 서서히 감축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감축한 다음 후반에 빠르게 감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단지 일의 순서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서로 다른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기상·기후 환경과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상·기후 상태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당장 관련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그런 부담은 소비자가 일정한 부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 희생을 요구하려면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적극적이고 담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각 주체들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려워 미래 세대에 더 큰 재앙을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올여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나타난 열파, 가뭄, 산불 그리고 집중호우 현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확실한 사실이 있다. 기후위기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은 차별이 없고, 예측도 쉽지 않다. 올여름보다 내년 여름을 맞이하기가 더욱 두려워지는 이유다.

기후위기 시대, 인류 구원할 작물은

쌀·밀·옥수수 3종
세계인 칼로리 절반 섭취

가뭄 저항성 강하고
다년생 탄소 배출 줄인
타로·컨자 등 5종 주목



인류는 과거 6000종이 넘는 작물을 재배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인은 칼로리의 절반을 쌀, 밀, 옥수수 등 세 종에서 섭취한다.

뜨거운 날씨에 강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작물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소개했다. 더운 지방에서 재배됐다가 근대 이후 버려졌거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개량된 품종들이다.

■ **아마란스** 가뭄에 튼튼한 한해살이 작물이다. 잎에서 씨앗까지 다 먹을 수 있어 버릴 게 없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채소로 먹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퀴노아처럼 씨앗을 먹었다. 아마란스 잎은 볶아 먹고, 씨앗은 구워서 꿀이나 우유에 타서 먹는다. 우크라이나가 아마란스의 최대 생산국이다. 국내에서도 2013년 강원 평창에서 대규모 재배에 성공했다.

■ **포니오** 아프리카에서 '추장과 왕의 음식'으로 불렸던 전통 작물이다. 혈당 지수가 낮고 글루텐이 없어 현대인의 기호에도 맞는다. 포니오는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2~3m 지하의 물을 빨아들인다. 이런 이유로 뛰어난 가뭄 저항성을 갖고 척박한 땅에서도 죽지 않는다.

■ **동부 콩** 서부 아프리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다가 북미로 건너가 가축 사료용 작물이 됐다. 씨앗은 물론 잎에도 단백질이 많아 여전히 식용으로 쓸모가 많다. 나이지리아가 최대 생산국이다. 가뭄에 매우 강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대표 작물이다.

■ **타로** 동남아시아와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 열대 지방에서 주식으로 이용된 뿌리 작물이다. 우리나라 토란과 비슷하다. 온대 지방에서도 타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에서는 다년생 타로를 일년생으로 개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컨자** 밭을 갈면 흙 속에 격리돼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깊은 뿌리가 흙을 고정해 탄소를 잡아두고 여러 해를 사는 작물일수록 기후위기 시대에 유리하다. 미국의 지속가능 농업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컨자는 밀과 달리 다년생 작물로 3m 되는 뿌리를 갖고 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의류업체 파타고니아는 2016년부터 컨자 밀을 이용해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오늘의 날씨

자세한 정보는 weather.mk.co.kr

23(화)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 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경향신문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019면 사람

인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박용민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
국 심사임용과장 손무조

■기상청 ▲차장 장동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장급 임
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 류
제명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

부추진단 정책기획국장 김희수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
FICC리서치부 황병진
■우먼타임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한

기봉 ▲이사 박광신
■이코노믹데일리 ▲산업부팀장(부장대
우) 김현수 ▲금융시장부 팀장(차장대
우) 신병근

경향신문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019면 사람

부고

■김동운씨 별세, 인환 한솔교육 대표이
사·길환 한국마케팅협회 이사장·경환 에
스디오텍스 전무 부친상=22일 오전 서울
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258-
5979

■유재숙씨 별세, 김천구 전 철원군 안전
도시과장·호열·재림씨 모친상, 황민홍씨
장모상, 심정자·조은희씨 시모상=22일 오
전 3시30분 이대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650-5121

■서도석씨 별세, 해창씨·윤재 코스콤 시
장업무부 차석 부친상=21일 오후 신촌세
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20분
(02)2227-7500

■박분환씨 별세, 정경식씨·명지 삼성증
권 투자정보팀장·영자·영현씨 모친상, 김
영욱씨 장모상, 임성애·이미라씨 시모상=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30분 (02)2227-7500